



백 일 우
연세대 기획실 정책차장

과감한 출발을 시작해야 …

기여우대 입학제 논란이 뜨겁다. 지난 5월 연세대학교가 비물질적 기여에 대한 기여우대 입학제 실시 방침을 밝히면서 주요 일간 신문이 이 문제를 다루는가 하면 대학의 게시판마다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사학 발전 방안의 하나로 지난 1986년 교육개혁심의회가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논의가 시작된 기여 입학제는 1997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재정경제원, 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도입을 교육부에 건의하였으나 당시 사회적 여건 미성숙을 이유로 반려된 바 있다. 이제 이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냉정히 대처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암울한 사립대학의 장래

기여우대 입학제 논의와 관련하여 직시해야 할 사실은 우리 나라 고등교육기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대학들의 재정 상태가 극도로 열악한 형편에 있다는 점이다. 학교법인 전입금 규모는 매우 영세하고, 대학 예산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립대학들은 매년 학기초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된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저지 투쟁으로 총장실마저 점거되는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국립대학 출신이나 사립대학 출신이나 국가 발전에 기여함에는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대학 예산의 평균 1~2% 수준에 불과하여 거의 포기되다시피 한 상태이다. 선진국의 사학들은 대학 재정의 20% 수준의 정부 보조를 받고 있으며,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 재정에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학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막대한 기부금에 힘입어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

조기 해외유학의 허용으로 매년 천문학적인 국부가 외국 교육기관으로 유출되고 그것도 모자라 해외 유학 이민마저 줄을 잊고 있는 현실이지만,

“

기여입학 우대 제도는 절망적 상태에 처한 사학 재정을 개선하여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해결방안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

수년 내에 우리 사립대학의 재정 형편이 개선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외국 유명 대학들은 첨단 정보화 교육 매체를 이용하여 세계 교육시장을 석권할 준비를 완비하여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값싼 교육을 시키는 것이 대학의 생존 전략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세계 최상위권 대학의 탄생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과욕이다. 기여우대 입학제도는 절망적 상태에 처한 사학 재정을 개선하여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해결방안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기여우대 입학제 반대 논리에 대한 검토

부모의 재력을 바탕으로 한 대학 입학은 국민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오랫동안 거부 반응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기여우대 입학제를 반대하는 데에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겠지만 그 내용이 과연 정확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이번 기회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여우대 입학제가 사회 계층의 고착과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라는 주장은 그 심층을 들여다 보면 정확한 논리는 아니다. 기여우대 입학제가 실시되지 않아도 우리 사회는 이미 기득권 층의 해외 유학이나 부의 세습 등을 통해 계층이 고착화되고

위화감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진 재원을 외국의 대학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을 위해, 다수의 국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것이 국가 이익과 공리에 맞는다고 본다.

둘째,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교육의 기회 균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는 기여우대 입학이 사립대학에 한해 법적 정원 외로, 그것도 입학 정원의 1~2% 수준으로 허용하자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논리적 타당성이 적다. 교육 기회의 균등 원칙은 우리 모두가 지켜나가야 할 보편적 가치임에 틀림이 없다. 무상 등록금 제도를 채택하는 유럽의 국립대학을 대표적 예로 하여 전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 정신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립대학을 설립하고 막대한 대학 운영 예산을 정부가 직접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국가 차원에서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대학은 독자적 건학정신과 교육 목표 하에 설립된 대학이므로, 이에 합당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 타당성을 갖는다. 따라서 법적 정원 외로 극소수의 인원을 선발하고자 하는 이 제도가 교육 기회의 균등 원칙을 해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립대학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한다는 일부의 우려는 모두가 가난해져야 공평하다는 논리이므로 발목잡기와 다름이 없다. 황금만능주의 가치관을 부추긴다는 주장은 기여우대 입학제의 시행에 있어 계속 경계하여야 할 대목이지만 제도 운영 방법 여하에 따라 그

부작용을 줄여나갈 수 있다.

넷째, 외국 대학이 하니까 무조건 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기여우대 입학제를 시행하는 대학들이 세계의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인정해야 할 것이다. 기여우대 입학제도가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은 지난해에 5억 8천만 달러를, 하버드 대학은 4 억 8천 5백만 달러를 각각 기부 받았다. 하버드 대학의 경우는 192억 달러에 이르는 기금 운영을 위한 회사를 따로 운영하고 있을 정도이다. 외국 대학이 해서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들 대학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움트고 있는 기여 문화를 왜곡시킬 가능성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대가성 없는 기부를 할 만큼 우리의 기부 문화가 성숙되지 못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할머니가 삼바느질을 해서 모은 전 재산을 대학에 쾌척하는 기사를 볼 때마다 국민들은 흐뭇한 미소를 띠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그야말로 '기사'가 될 만큼 드문 일이다. 더구나 그렇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대학이 해 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 우리 대학의 풍토에서 조건 없는 기부나 기여는 아직까지 요원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끝으로,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시기 상조론을 밀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조사 응답자들 중 상당수가 기여우대 입학제의 근본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과거에 논의되어 온 기부금 입학제와 동일한 시각에서 응답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기여우대 입학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이 제도가 가져올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각 신문사의

여론 조사, 인터넷 투표 등에서 상당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기여우대 입학제 도입시 기대효과

그렇다면 기여우대 입학제의 도입시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첫째, 기여우대 입학제는 사립대학 재정의 획기적 개선을 가져옴으로써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소수의 기여 입학자들로 인해 가난하지만 능력 있는 다수의 학생들이 보다 좋은 교육 여건 하에 수학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탁월한 학업 성취도를 보인 학생을 최상의 대우를 해주는 조건으로 선별하여 학문을 계속할 후속 세대로 키워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봐서는 예전 수준의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을 모집하면서도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여우대 입학제는 사회의 유휴 재원을 교육 부문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다. 이 제도가 아니었다면 교육으로 편입되지 않고 비생산적 용도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경제력을 대학 교육으로 편입시켜 유용하게 쓰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셋째, 사회가 가진 재원이 경쟁국이 아닌 우리나라 교육에 쓰여지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국민 정서를 이유로 시기상조론이 대세를 이룬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사립대학들은 재정난에 휘청거리며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반면, 조기 유학과 유학 이민 등으로 해외로 유출된 막대한 교육 재원은 경쟁국의 교육 산업을 번성시키고 있다. 특히 어린 나이에 떠나는 유학일수록 비용이 지속적으로 크게 들어감에 비해 당사자가 귀국하여 국가에 봉

“

이제 지난날의 낡은 사고 방식과 논리는 재고되어야 하며,
시대적 변화를 도와시한 채 눈치를 살피며 머뭇거려서도 안된다.
자율 능력이 있고 엄격한 학사 제도가 확립된 대학에 한해
기여입학제를 허용하는 것이 시대적 대세이다.

”

사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매우 크다.

넷째, 학생 선발, 학사 운영 등에서 사립대학의 자율권 신장과 특성화된 교육을 기대할 수 있다. 사립대학들은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 원치 않는 정책에 순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에 일률적으로 매달리기보다 나름의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기여우대 입학제는 보다 다양한 방식이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대학입학 제도의 개선 효과를 가져오고, 장학금의 대폭 확대, 등록금 인상 억제를 통해 결과적으로 교육 기회를 신장시키는 장점이 있다. 교육 기회에 대한 이상과 현실간의 갈등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여우대 입학제는 개인이나 단체가 물적·인적·정신적 자산을 가지고 대학, 사회,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사회 풍조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우선은 비록 불확실하지만 미래의 혜택을 기대하며 대학에 기여를 하겠지만 이러한 기여문화의 형성은 점진적으로 조건 없는 기부 문화의 정착을 위한 터전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성공적 시행을 위한 조건

기여우대 입학제의 시행에 있어서는 사회적 부

작용을 염두에 두면서 운영의 묘와 투명성을 살려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것은 기본 조건, 필수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국민들이 기여 우대 입학제에 대하여 우려하는 것도 이 필수 조건의 시행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에 있으므로 제도의 성패는 이들 조건들의 완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체적 방법을 여기에서 모두 열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몇 가지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원 외 1~2% 이내에서 특별전형으로 선발되되 납득 할만한 수준의 수학능력을 기본 요건화 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에게 미칠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상당수 대학들에서는 사회 기여자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소년소녀 가장, 환경미화원 자녀, 벽·오지 및 도서 근무 공무원 자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장기복무 하사관 자녀 등)에 대하여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왔다. 이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수행 능력이 크게 문제되었다거나 특정 대학이 쌓아온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기여우대 입학자들에게도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 능력을 요구한다면 위의 경우의 연장선상에서 원만하게 대학 구성원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여우대 입학제를 시행하는 대학은 입학보다 졸업이 어려운 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 과거와 같은 일률적 졸업 정원제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

하여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고 졸업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만약 전체 재학생의 10~20%는 성적 기준 미달로 결국 졸업을 하지 못하고 70~80% 이내의 학생만이 4년 안에 졸업할 수 있는 수준의 대학이 된다면 기여우대 입학제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학업 성취 수준 미달로 졸업하지 못하는 비율을 대학 평가의 중요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이를 제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기여와 혜택 부여가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 지지 않도록, 즉 기여 시점부터 5~10년이 경과한 이후에 혜택을 부여한다면 기여자의 명예를 지키는 한편 우리의 기여 문화를 크게 개선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이 점 역시 기부금 입학제가 아닌 기여 입학제로서의 장점을 지키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넷째, 기여 재원은 교육 및 연구 시설의 확충과 장학금으로만 사용하도록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사용 내역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혜택이 전체 학생에게 꼴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학외 인사를 포함한 위원회가 재원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투명한 재원 활용을 위하여 유용하고, 필요하다면 시민단체의 참여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우리가 맞은 21세기 사회는 글로벌 경쟁의 시대이며,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이미 고등학교 졸업자의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고, 1~2년 내에는 대학 총 입학 정원이 진학 희망자보다 많아지는 등 고등교육 환경 여건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이제 지난날의 낡은 사고 방식과 논리는 재고되어야 하며, 시대적 변화를 도외시한 채 눈치를 살피며 머뭇거려서도 안된다. 자율 능력이 있고 엄격한 학사 제도가 확립된 대학에 한해 기여입학제를 허용하는 것이 시대적 대세이다. 시행 조건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하고, 더 늦기 전에 과감한 출발을 시작해야 한다. ■■■

백일우

연세대 교육학과와 경제학과에서 문학사와 경제학사 학위를 받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교육재정·경제학회 이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로서 기획실 정책차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교육경제학』, 그리고 다수의 논문이 있다.